

한·칠레 FTA 비준 시급



이광호(KBS 해설위원)

농민들의 반대속에 논란을 벌여왔던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됐다. 국회는 한·칠레 FTA 비준안을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농촌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농민들은 동의안 처리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는 등 충돌을 빚기도 했다. FTA가 발효되면 값싼 수입 농산물이 밀려오게 되고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국내농가는 그대로 무너진다는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한·칠레 FTA는 지난해 2월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체결됐으나 농민들의 반대시위로 국회 비준을 받지못해 1년 가까이 표류돼 왔다.

비준 늦어져 한국상품 시장점유율 추락

그동안 FTA 비준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받는 피해는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 FTA에 서명한 뒤 1년이 가깝도록 비준안 동의를 미루는 사이 칠레 시장에서 국산 자동차의 비중은 2위에서 4위로 떨어지고 휴대전화기의 수출도 위협받고 있다. 30여개국과 FTA

를 체결한 칠레가 대부분의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어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칠레 대사와 한국상사협회장이 우리 국회의원 전원에게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칠레 의회도 우리 국회의 미온적인 자세를 이유로 상원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미국과 칠레간 FTA가 발효돼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FTA 발효시 대 칠레 수출 크게 늘듯

한·칠레 FTA가 발효될 경우 칠레는 즉시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TV, 에어컨 등 2천3백개 품목의 관세를 없애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칠레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과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하고 포도도 계절관세를 매기기로 해서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방침이다.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서 국가간 FTA 체결은 각국의 필수적인 사항이다. 가동되지 오래된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유럽연합 등 국가간 또는 지역적 무역

협정이 2백여 개나 체결돼 있다. 협정국들은 당사국들간 단일시장 구성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타지역 경제권을 견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FTA 체결에 실패하면 국제적인 미아가 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국제 무역시장에서 철저히 이른바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FTA서 제외되면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

더욱이 대외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는 FTA가 필수조건이다. 수출로 먹고살다시피 하고 있는 우리가 세계 180여개 FTA에서 제외돼 국제적인 외톨이로 남아있게 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대신 FTA로 아픔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FTA 지원 특별법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과 농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10년동안 119조원의 자금도 지원된다.

자유무역협정은 두나라 시장을 하나로 만들어 서로 자신있는 물건을 팔아보자는 것으로 현재 전세계에는 184개 협정이 가동되고 있다. 내년이면 전세계 교역량의 55%가 FTA 국가간 무역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남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칠레와 맺은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민 단체들은 FTA가 가동되면 칠레 농산물이 관세없이 싼값에 쏟아져 들어와 국내 관련 농업이 무너진다고 반발해 왔다. FTA가 실시되면 칠레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포도의 경우 값이 우리의 30% 정도 밖에 안돼 과수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에 1조원의 지원방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농촌살리는 장기대책 수립해야

농민단체들도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 수출이 위축돼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피해가 온 국민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농민들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비준안 처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섬세한 농민들을 설득하고 농업분야 보호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농가부채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농업 직불제를 보완하며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Z]